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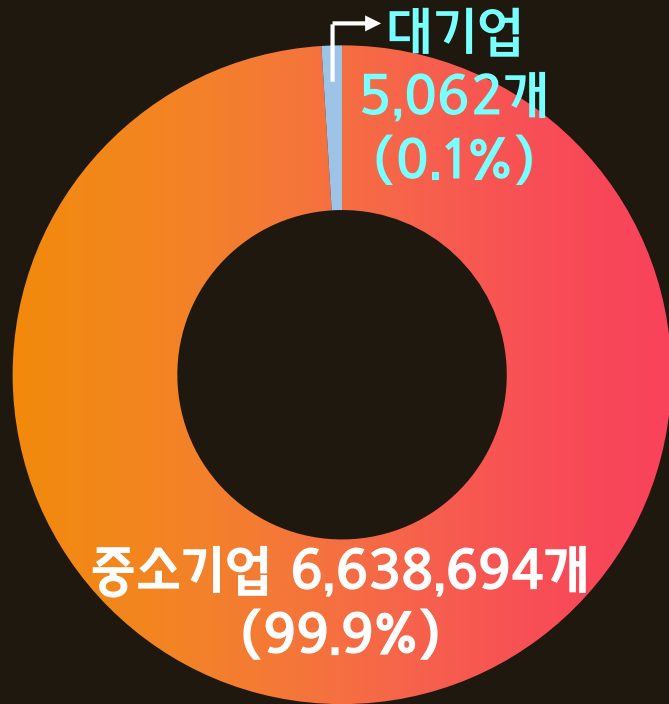
대·중소기업
양극화 실태와
중소기업 현안 과제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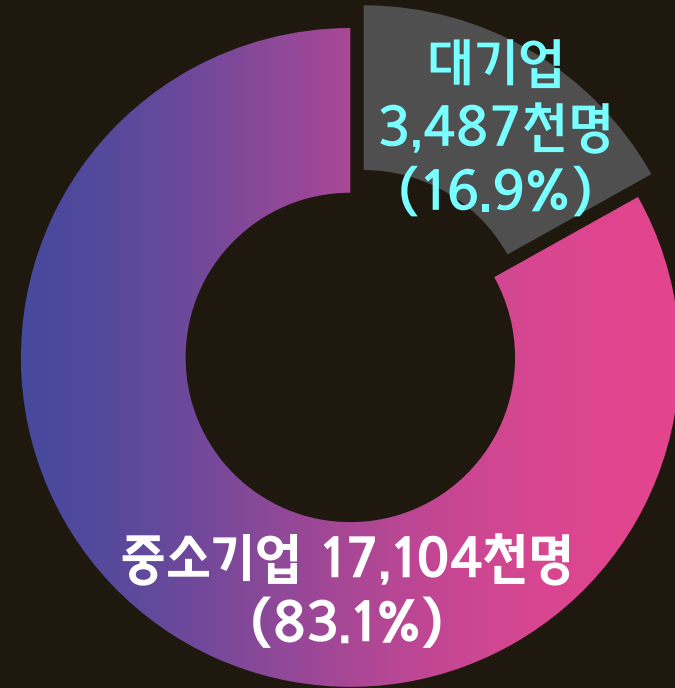
- I. 중소기업 현황
- II. 사회적 화두
- III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
- IV.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·중소기업 양극화 변화 정도
- V. 양극화 원인, 경제3불 해소
- VI.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현안

I. 중소기업 현황

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의 **99.9%(663만)**, 고용의 **83.1%(1,710만명)**를 차지하는 **국민경제의 근간**이자 **일자리 창출의 원천**



총 사업체수 : 6,643,756개



총 근로자수 : 20,591천명

자료 : 중소기업 기본통계(중기부, 2020)

II. 사회적 화두

① 공정 ② 양극화 ③ 저성장 고착화

닫힌 문(門)과, 막힌 길(道)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
사회전반 불공정 심화, 양극화와 저성장 고착화

中企
신규투자
고용창출
여력축소

중소기업 일자리 : 고용의 83%

靑年
닫힌 '취업의 門'

청년 체감 확장실업률 21.7%(105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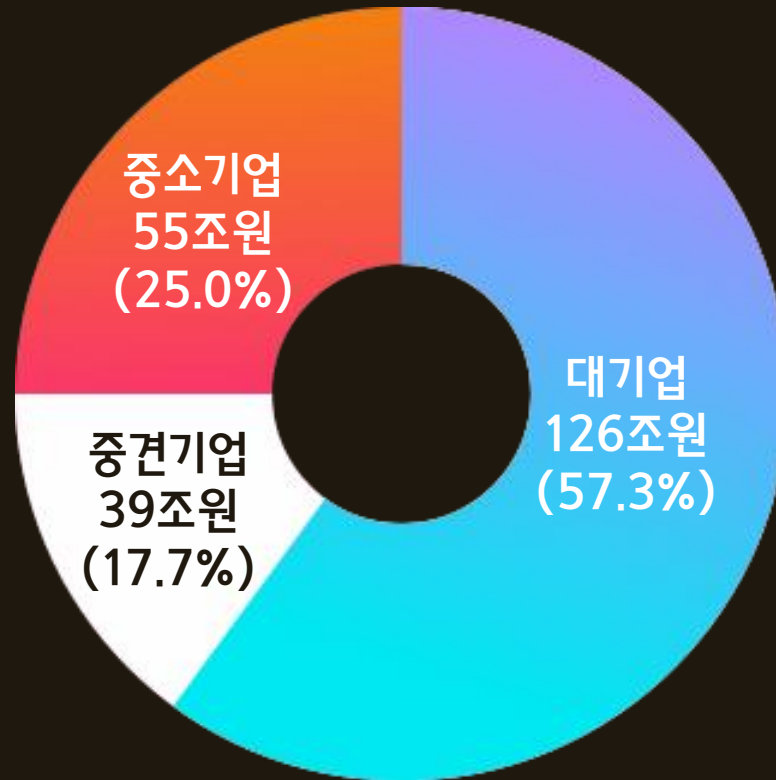
* 청년 5명중 1명은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

中企 근로자
막힌 '소득 확대'

III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

- ① 이익의 양극화 : 0.3%의 대기업이 총 영업이익(220조원)의 57.3% 차지
- 99%의 중소기업은 25.0% 불과

중소기업
25.0%



대기업
57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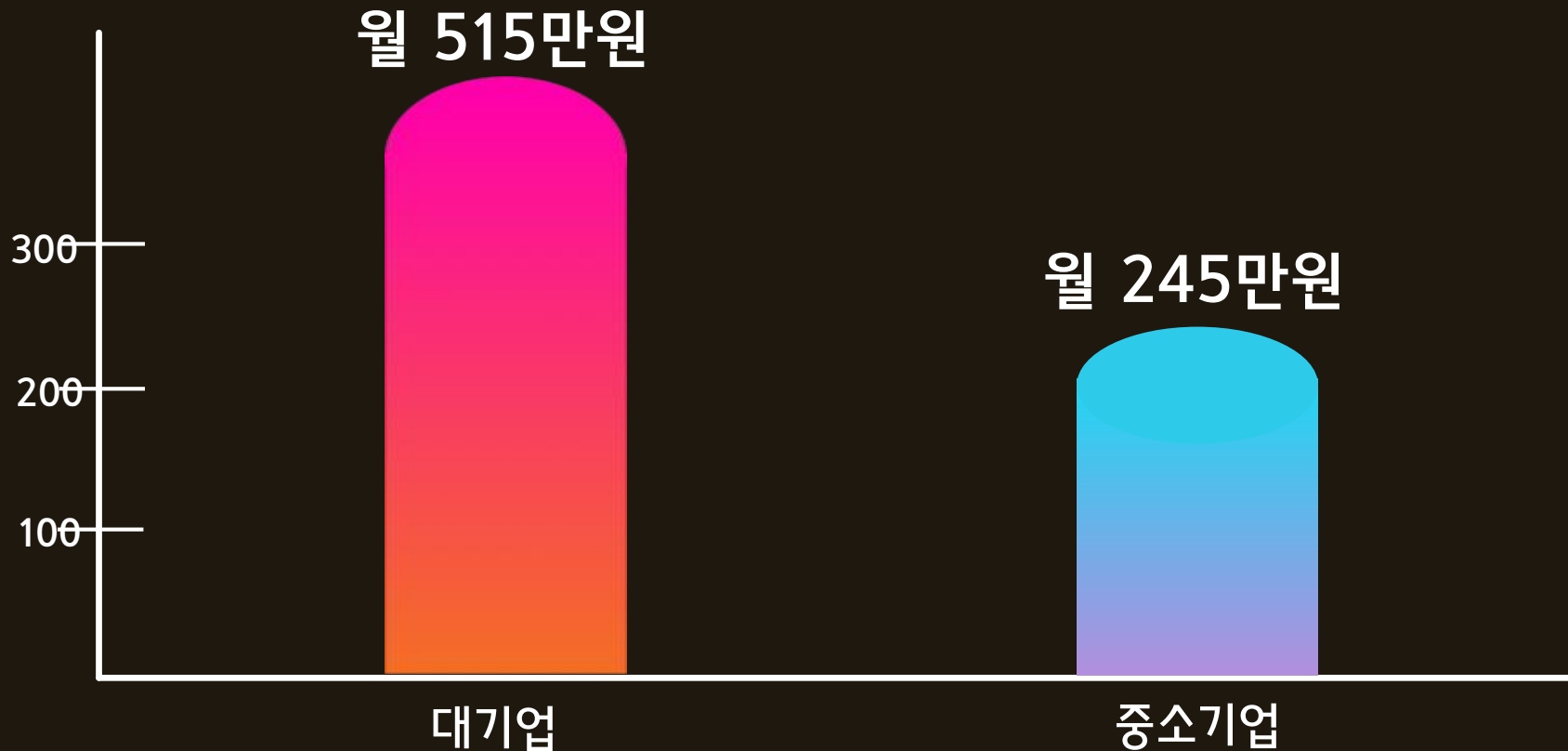
총 영업이익 220조원

자료 : '19년 영리법인통계(통계청, 2020)

III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

② 소득의 양극화 : 대·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 2.1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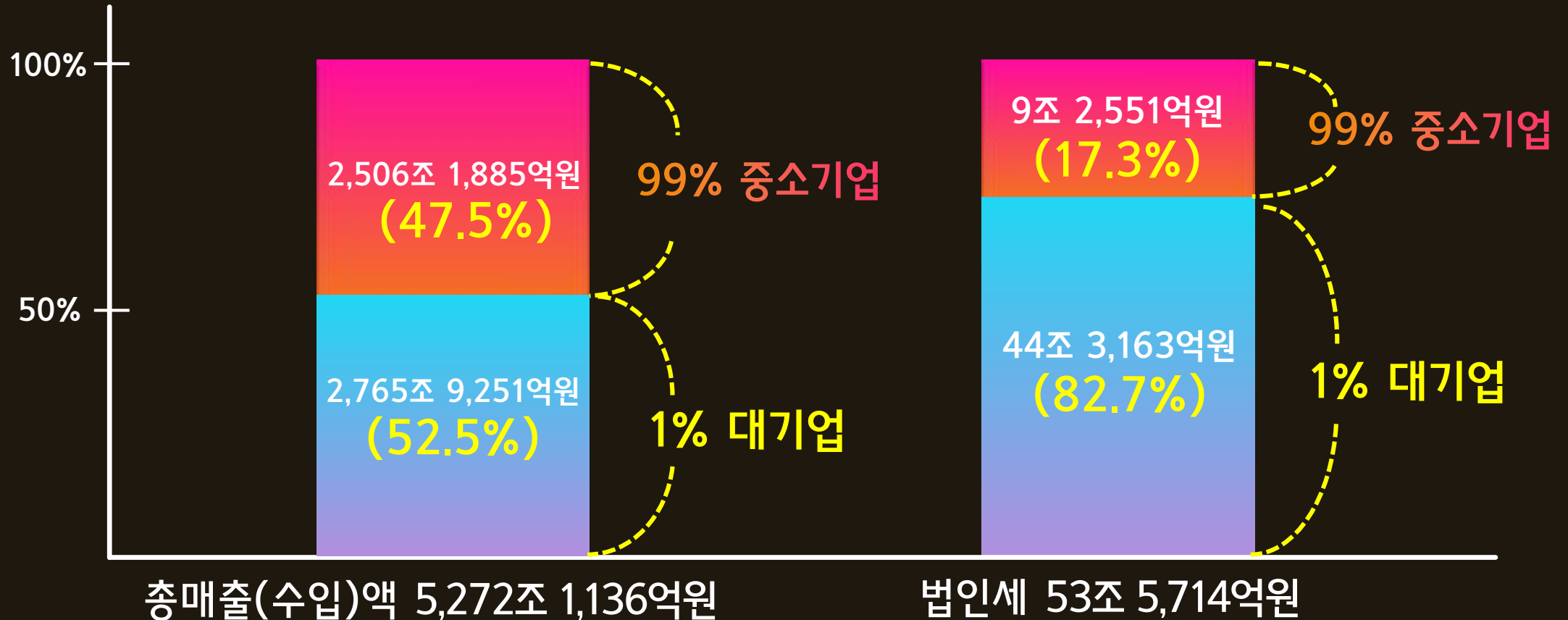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, 대기업의 47.6%



자료 : '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결과(통계청, 2019)

III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

- ③ 납세능력의 양극화 : 대·중기간 총매출액은 52% vs 48%로 비슷, 법인세는 83% vs 17%
- 대기업의 이익독점으로 중소기업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익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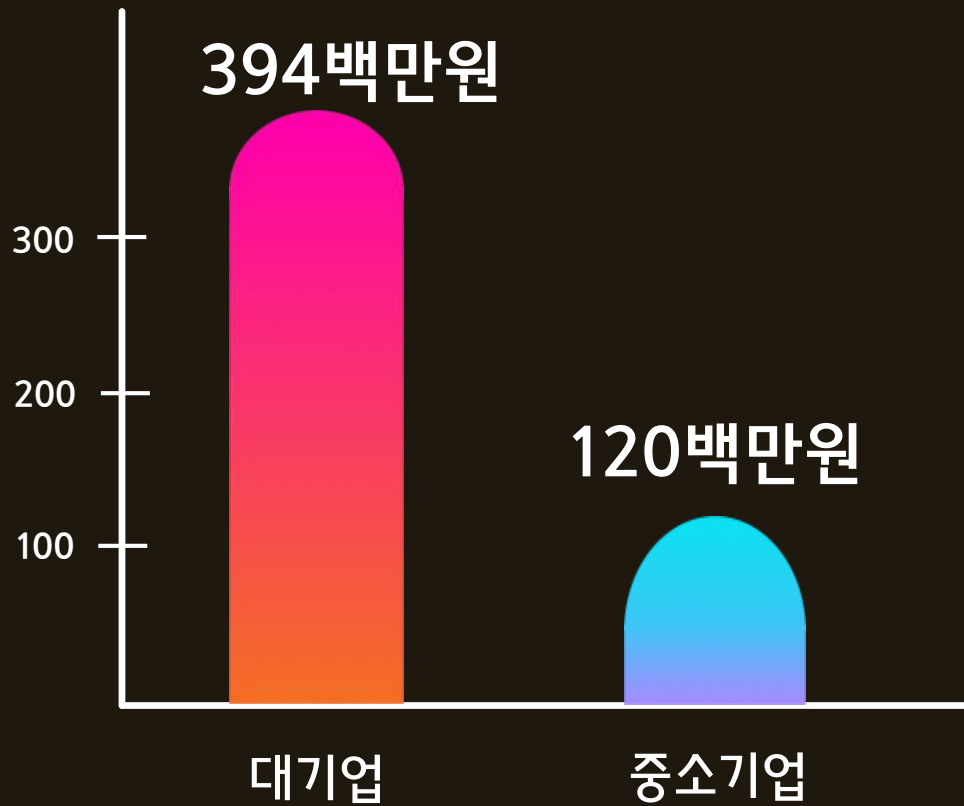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0년 귀속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(국세청, 2021)

III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

④ 생산성 양극화 : 대·중기 생산성 격차 **3.3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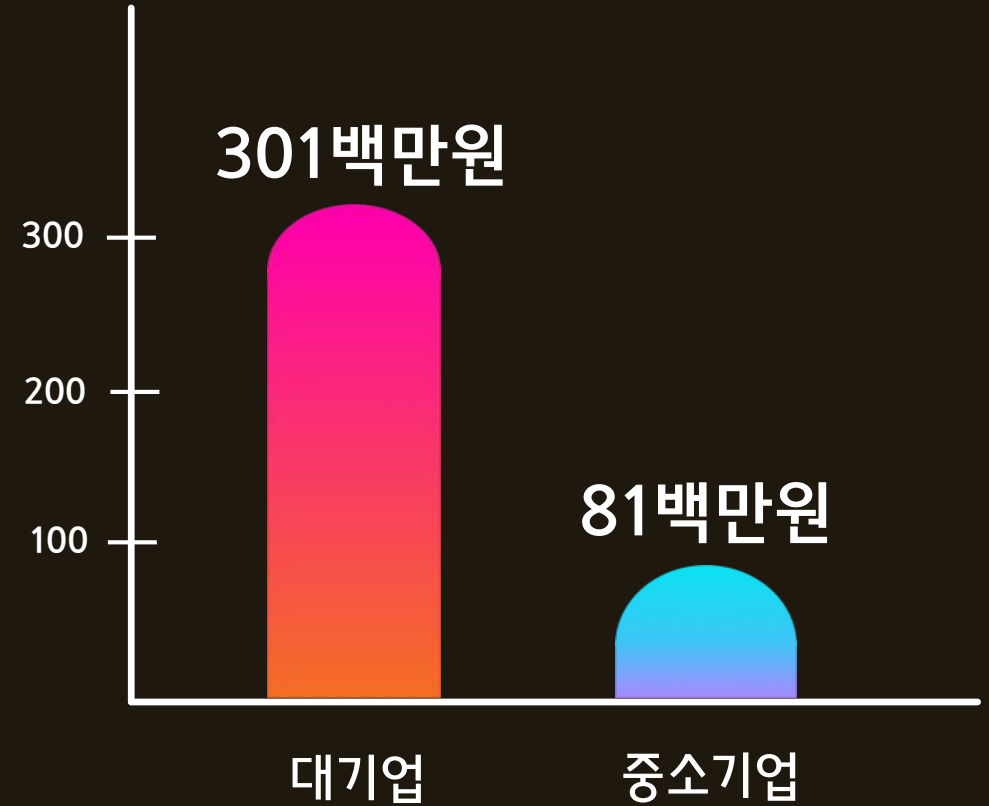
- 중기 1인당 노동생산성, 대기업의 **30%**



자료 :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(생산성본부, 2020)

⑤ R&D 양극화 : 대·중기 R&D 격차 **3.7배**

- 중기 1인당 연구개발투자, 대기업의 **26.9%**



자료 : '19년 연구개발활동조사(과기정통부, 2020)

III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

⑥ 플랫폼의 독점화 : 소비자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 피해 심화

-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 다수 확보 → 시장 독과점 → 유료화(수수료 인상) → **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**

소비자

시장독식을 통한 비용 부담 증가

직접 진출을 통한 시장 잠식

- 지네발식 사업 확장
 - 카카오 : ('15) 45개 → ('21) 158개
- 골목상권 영업 침해
 - 배민(B마트), 요기요(요마트)
- 우회 진출로 규제 회피
 - 네이버(금융, 유통, 엔터 사업 진출)
- 정보 독점, 직영 운영
 - 숙박앱(야놀자, 여기어때)

입점
업체

플랫폼 의존도 증가 (숙박앱 64%, 배달앱 94%)
불공정거래 발생 (20.7% 경험)

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

- 40%수준의 광고·수수료 부과
 - 배민, 무신사, 야놀자
- 불분명한 노출 기준
 - 쿠팡(자사상품 상위)
 - 네이버(검색 알고리즘 조작)
- 일방적인 정산절차
-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차단

III. 대·중소기업 양극화 실태

대기업의 이익 독점

中
企

영업이익
감소

임금지불
여력약화

中企근로자
소득 감소

생산성
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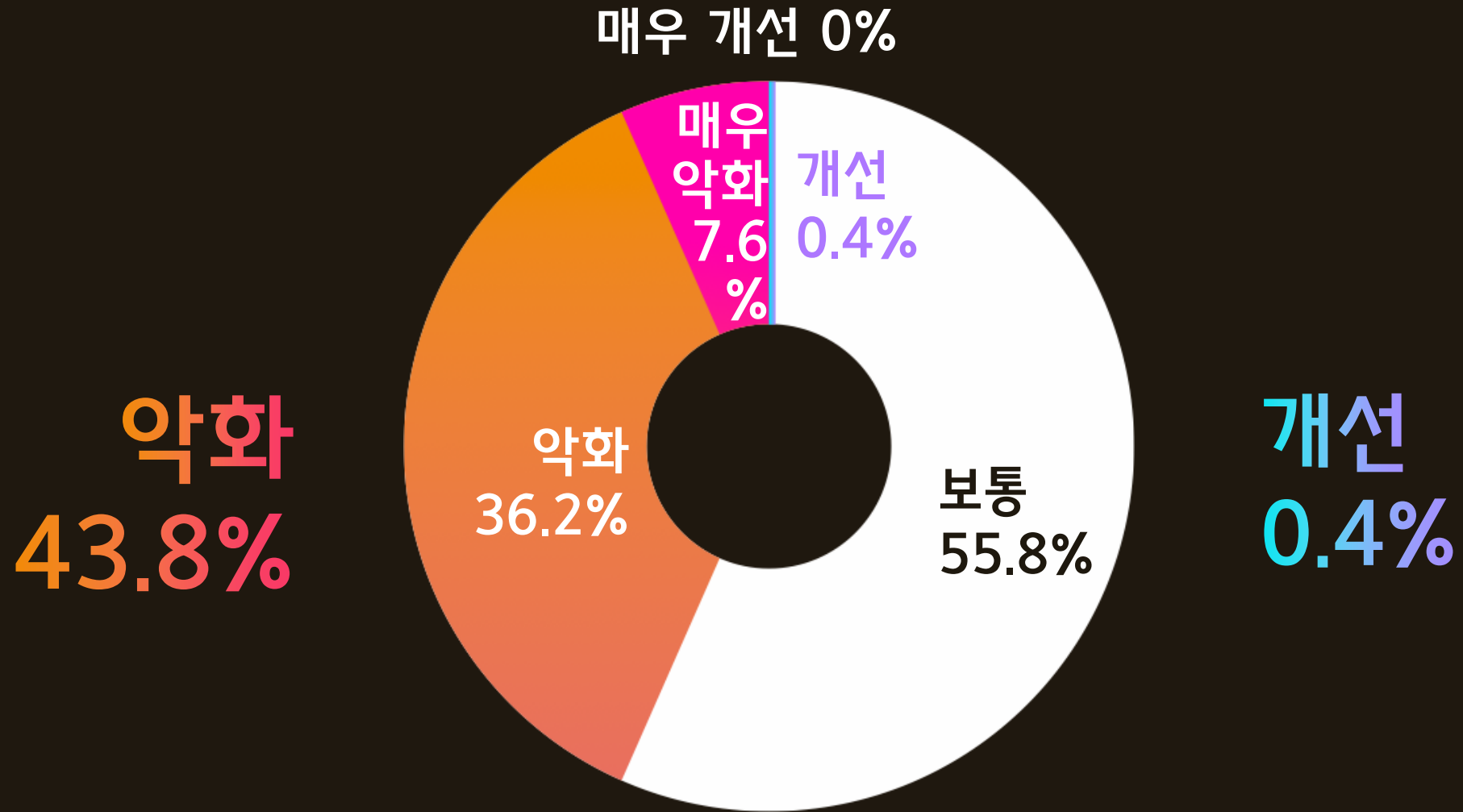
R&D
투자여력
약화

일자리 미스 매칭 심화

중기 부족 인력(21만명) VS 청년 체감실업자(105만명)

일자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

IV.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·중소기업간 양극화 변화 정도



자료 : 대·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(중기중앙회, 2021.5)

V. 양극화 원인, 경제3불 해소

- ①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경영애로
- ②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

거래의
불공정

+

시장의
불균형

+

제도의
불합리

V. 양극화 원인, 경제3불 해소

1. 거래의 불공정

현상

원·하청 기업 간
불공정성 문제로
납품 중기
경영피해 심화

-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
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 못해
수익성 악화

대상

원·하도급 기업,
위·수탁기업 간
발생

- 수탁기업비중 : 42.1%
- 모기업 매출의존도 : 83.3%

* '19년 중소기업실태조사(중기부, 2020)

문제

불공정거래
피해 중소기업의
성장 지체 초래

- 3년간 불공정 경험 : 9.3%
- 매년 납품단가도 깎아줬는데 납품
대금마저 늦게 받는 이중고

*대·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
위한 의견조사(중기중앙회, 2021.5)

V. 양극화 원인, 경제3불 해소

2. 시장의 불균형

현상

소수 대기업의
시장 장악 및
이익 쏠림

· 온라인유통시장 점유율 : 46.5%
(17년)78조→(20년)161조원

*온라인쇼핑동향조사(통계청, 2021)

대상

대형 유통기업
+ 온라인 플랫폼 기업
vs 입점 중소기업
· 소상공인

· 온라인플랫폼에서 자사매출액의
50%이상 나오는 입점기업 73.9%

*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(중기부, 2021)

문제

우월적 지위를
활용, 중소기업과
소상공인에 과도한
비용 및 책임 전가

· 3년간 불공정 경험 : 20.7%
· 수익배분 : 불균형 39.7%, 균형 11%
(But. 규율할 법과 제도 부재)

*대·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
위한 의견조사(중기중앙회, 2021.5) 12

V. 양극화 원인, 경제3불 해소

3. 제도의 불합리

현상

중企·소상공인에게
차별적이고 불리한
제도나 관행 의미

- 조달시장 규모 : 145조(GDP의 7%)
- 조달시장 참여 중기 10곳 중 4곳 (39.3%) 합리적이지 않다

*대·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(중기중앙회, 2021.5)

대상

조달제도
(부정당 행정제재)

- 불합리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
- 경미한 위반사안도 제재, 기업활동 제한
-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불합리
- 법적 분리발주 미이행 관행 만연

문제

최저가격 중심의
조달체계로 중소기업이
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
곤란한 구조

조달시장 납품중기 연평균
9.5조원 손해*

*조달가격사전검증체계확립방안 연구
(아태행정산업연구원, 2017)

VI.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현안

1

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

- 노사합의시 월·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
-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(50인 미만)
- 탄력근로제 도입절차 유연화
-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·절차 개선

2

최저임금제도 개선

-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 및 규모별 최저임금 법제화
-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, 경제상황,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반영
- * 20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근로자 : 15.6%(319만)

3

납품단가 제값받기

-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도입(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계약종료시 대금 의무 조정 - 상생협력법·하도급법 개정)
- * 중소제조업 중 수급기업 비중 : 42.1%

4

공공조달제도 개선

- 조달시장 저가계약 관행으로 中企 손실 및 경영 악화
- 조달시장의 최저가 낙찰 유도 조항 폐지
- 낙찰 하한율 도입 및 상향 조정
-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

5

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

- 입점 사업자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부여
- 플랫폼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
-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
-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조속 제정

6

불공정거래 개선

- 과징금 재원 피해기금 마련 및 피해구제 사업 활용
-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
- 리니언시 제도 개선(대기업 요구로 부득이 담합에 가담한 2순위 中企 과징금 등 면제)

VI.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현안

7

중소기업 승계 원활화

- 창업주 70세 이상 中企 1만개, 계획적승계 위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확대(100→500억)
- 업종변경 제한 폐지,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
- 중소기업 승계지원법 제정 등

8

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

- 협동조합을 통한 中企간 공동사업 활성화
- 기업간 거래(B2B)에 대한 공동행위 허용
 - * 중기협동조합법 및 관련고시 개정
 - ** 소비자범위 명확화(하도급거래, 수위탁거래)

9

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

- 中企, 가장 큰 경영애로 "판로", 대부분 방송(홈쇼핑) 통한 제품 판로 희망
-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경쟁력 제고
 - * T 커머스 채널 허용, 송출수수료 인하, 고정 채널부여 등

10

中企전용 신용평가체계 구축

- 국내 신용평가체계, 대기업의 재무성과중심 운영
 - 中企, 신용평가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 받지 못함
- 기술력, 성장성 등 반영한 中企전용 신용평가체계 구축
- 中企 전용 신용평가기관 설치 등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감사합니다

KBIZ 중소기업중앙회